日 경제단체 "징용 배상은 끝났다"

다시 분노한 광주 징용 할머니들

"개인청구권 여전히 유효…시민단체와 항의 계속"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하는 게 먼저인데, 해결됐다고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파렴치하다."

일본 재계가 6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1965년 협정으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일 경제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은 광주의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들은 분노했다.

일본 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 등 일본 경제계는 이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기초로 지금까지 양국 경제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했다"는 취지의 '우호적인 한일경제관계의 유지·발전을 향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광주지역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2) 할머니는 "양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 사과를 먼저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미 해결됐다고만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일본기업들이 사과를 할 때까지 시민단체들과 항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일본 정부가 인도적 입장에서 조속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후지코시 및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들과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관계자들과 함께 7일 낮 12시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앞으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의 요망서에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사법부와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개인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도 비판하고 나섰다.

박인환 위원장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혜택으로 큰 성장을 이룬 가해자인 전범기업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가해자로서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개별 청구권은 1965년 협정과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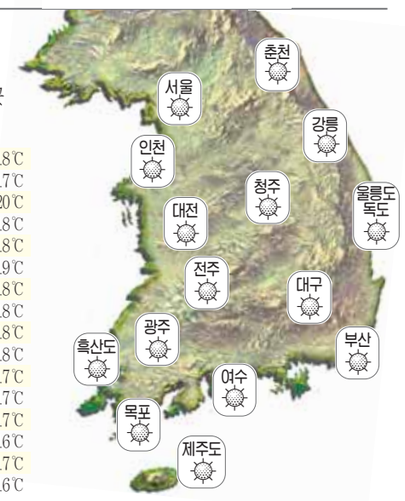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9분 해짐 17시 33분 | 달뜸 10시 34분 달짐 21시 06분

찬바람 쌀쌀

맑은 가운데 바람 부는 곳 있겠다.

광 주	맑음	11/18℃
목 포	맑음	12/17℃
여 수	맑음	14/20℃
나 주	맑음	8/18℃
완 도	맑음	11/18℃
구 례	맑음	10/19℃
강 진	맑음	9/18℃
해 남	맑음	9/18℃
장 흥	맑음	9/18℃
순 천	맑음	10/18℃
영 광	맑음	9/17℃
진 도	맑음	9/17℃
전 주	맑음	11/17℃
군 산	맑음	11/16℃
남 원	맑음	8/17℃
흑산도	맑음	14/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밀물	썰물
목포	04:21 17:06	09:30 22:10
여수	11:37 23:42	04:53 17:4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날 씨						
최저/최고	6/18	9/19	12/14	4/12	4/12	4/15

11만명 서명

광산교육지원청 부활

광주시민들 높은 관심

광주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11만여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6일 광산구와 광산교육발전협의회에 따르면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진행한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원상회복 서명 운동'에 10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광산구는 서명 참여자 중 광산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 주민은 2만1000여명으로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서명운동의 높은 참여율에 대해 현재 광주 2개 교육지원청 체계로는 광산구를 중심으로 폭증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령에 따르면 30만~50만명이 사는 도시의 학생 수가 3만~5만명이면 교육지원청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는 광주의 '지역교육청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여전히 서구와 북구 2곳으로 못박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의 한 관계자는 "광주 동구와 북구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은 8~9만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서·남·광산구를 담당하는 서부교육지원청은 27만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며 "광산구의 인구가 40만명, 학생 수도 7만명에 달해 교육지원청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성난 농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원들이 6일 광주시 광산구청 앞길에서 나락 20여t을 쌓고 있다. 농민들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11개 시·군·구 청사 앞길에서 "쌀값 23만원 쟁취"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민단체 "쌀값 인상" 벼야적 시위

광주·전남 11개 시군구 청사…무기한 농성 돌입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쌀값 인상 등을 주장하며 11개 시·군·구 청사 앞에 벼 500여t을 쌓아 놓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6일 오전부터 광주시 광산구청 등 광주·전남 지역 11개 시·군청 앞에 나락을 야적하고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에 야적한 나락의 양만 모두 500여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연맹은 "물가와 생산비가 덩달아 오르며 손해가 커지고 있지만 쌀 목표가격은 8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공급이 과잉되고 쌀값이 떨어져 결국 농민들이 손해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 회생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23만원 보장해주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는 구청사 앞에 나락을 야적하려는 농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구청 공무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 등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때까지 각 시·군청사 앞에 나락을 야적해 놓고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지법, 총인비리 업체 입찰제한 효력 정지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유예…입찰 참여 가능

총인 저감시설 공사 입찰 비리에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광주시의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이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6일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등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입찰 제한 처분 효력은 정지돼 업체들은 그동안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입찰 자격 제한으로 업체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하거나 금품을 건넨 대림산업(6개월), 코오롱글로벌(5개월), 금호산업(3개월), 남해종합건설(2개월), 현대건설(3개월)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광주시가 입찰제한 조치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건강기능식품도 이력추적관리제

건강기능식품에도 '이력추적제'가 내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 시행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은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제가 의무화된다.

/연합뉴스